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동향 및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김 철 희 (saveafrica@kdb.co.kr)

- ◆ 북한은 최근 주택 사유화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대표되는 경제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 중
- ◆ 경제개발을 위해 북한 내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정책 시행이 예상되며, 경제개혁을 통한 자본축적, 내수기반 마련 등으로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여건 개선 기대

□ 북한은 나선경제특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사유화 정책을 시범 실시하여 시장 경제로의 개혁을 지속 모색

- 나선시 당국은 '19.3월초 나선경제특구에 한해 국가 소유 주택의 가격을 정하고 현재 거주중인 주민에게 유상으로 분양하는 주택 사유화 방안을 발표
 - 주택의 개인 소유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정책으로, 기존 영구임대 형태로 입주해 있는 주민들에게 일시불 또는 2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소유권을 부여
 - 입주권을 확보하면 국영주택을 개인소유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 나선시의 정책 발표 이후 간부 및 '돈주' 등 신흥자본가를 중심으로 자본과 수단을 동원해 기존 주택의 입주권 확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도

※ 자유아시아방송('19.3.24자), "북 라선시, 주택 사유화 정책 시행"

북한 나선시 전경



자료 : 연합뉴스('18.6.2자)

북한 나진·선봉 경제무역특구



자료 : 연합뉴스('14.7.24자)

- 북한 정부는 주택판매를 통한 민간자금 흡수와 재산세 등 세수확대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범실시 후 법적·제도적 보완을 거쳐 대도시로 확대할 전망
 - 과거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포전담당제' 등 경제개혁 정책도 시범실시 후 제도 보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한 바 있음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직후부터 시장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경제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하여 기업, 농업, 금융분야 등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명명한 경제개혁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

- ‘12.6월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방침을 통해 기업에 상품가격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경제관리 방법의 개선을 공표(6.28방침)

- ‘14.5월 당·국가·군대·기관의 책임일꾼들과의 담화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한 데 대하여’란 주제 발표를 통해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포전담당책임제**’ 등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개혁정책 제시(5.30담화)

* 공장·기업소가 독립채산제를 실시해 생산계획 수립, 자재구입, 제품 판매 및 임금 지불 등 실질적인 경영자율권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 10~25명으로 구성된 협동농장의 분조를 3~5명의 단위로 나누고 분조 내 농민별로 일정규모의 포전(논밭)을 맡겨 생산의욕을 높이는 방안

- 김정은 위원장 집권이후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경제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전하는 지방분권화 정책 강화

- ‘15.12월 제3차 전국재정은행 일꾼대회에 보낸 김정은 위원장 명의 서한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통해 북한내 상업은행 설립을 공식화

- 중앙정부의 지원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별 자금 확보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은행 설립을 금융개혁의 첫 사업으로 추진

※ 김영희(2019년), “북한 지방은행 설립의 한계와 과제”, KDB북한개발 2019년 봄호

- ‘19.4월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계획화 사업을 보다 개선하고 경제관리의 중요 고리들인 가격, 재정, 금융 문제를 경제원리와 법칙에 맞으면서도 현실적 의의가 있게 해결하여 기업체들과 생산자들이 높은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일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경제개혁 의지 표명

□ **대북제재 지속에 따른 경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혁정책 시행이 예상되며, 경제개혁을 통한 자체 자본 축적과 내수시장 기반 마련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의 토대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 자율성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된 경제개혁 정책은 기업 및 농업분야 개혁에서 금융 및 소유제 개혁까지 확대되었으며, 향후 생산수단 사유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혁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

- 시장의 수요가 정부정책을 견인하고 정부정책이 다시 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형태, 즉 시장과 정부정책이 상호 견인하는 방향으로 경제개혁 진행 예상
-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전력, 투자자원 등의 제약으로 경제개혁의 효과가 부분적 생산 효율성 제고에 국한되고, 생산능력 확충에도 한계 예상
- 북한이 단계적으로 시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자체 자본 축적을 통한 내수시장 기반 구축이 가능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리스크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개성공단 재개시 공단진출 우리기업의 판로 다양화, 중국 소비재 대체 등을 위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북한 내수판매 추진도 검토 가능
-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앞서 북한의 경제개혁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및 지식교류 우선 추진 필요
-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시장경제 하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 북한의 안정적인 경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통계, 회계 및 외자조달, 개발금융 등 경제·금융 분야의 지식교류 추진
- 북한의 능동적·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밀한 수요 파악과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보유한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간 협력방안도 적극 고려 필요